2024 Offshore Wind Supply Chain

2024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서 문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일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략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조업이 강한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이 앞다투어 해상풍력 산업을 **육성산업**으로 두고 적극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직 걸음마 수준에 있습니다. 지난해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처음 시행하여 1.431GW의 사업이 확정되었지만 입지개발-인허가-조달-상업운전-해체의 공급망 전과정에 대한 정책방향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나날이 성숙하는 경쟁국의 기술력과 경험 앞에 국내 공급망 기업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이름이 무색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에게도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해상풍력은 터빈뿐 아니라, 해상구조물, 케이블, 변전소, 항만건설 등에서 여러 산업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터빈 기술은 다소 뒤처지지만, 다른 분야에는 훌륭한 기술을 갖춘 많은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이 건재하며 이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해상풍력 산업을 충분히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차전지, 조선업, 자동차, 방위산업 못지않게 우리나라를 대표해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은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을 일으키고자 이 산업을 이끄는 기업과 싱크탱크,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지난해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논의를 거쳐 정책제안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정책제안서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활성화와 공급망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여섯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회가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7월 12일

요 약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본 정책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입찰물량 로드맵 발표와 인허가 창구 단일화

- 2030년까지 연도별 입찰물량 로드맵 발표
- 민간시장(Private Market) 육성을 통한 시장 규모 확대
- 개발 중 사업의 진행수준 평가와 주요 인허가의 통합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2. 국가주도 항만·산업·발전단지 건설과 지원

- 정부 주도 계획 입지제도 시행 및 산업 육성 종합 계획 수립
- 정부 주도 인허가 단일 창구 운영
- 해상풍력 산업육성 지원 및 산업계 정보교류 지원
- 보급에 필요한 인재육성 로드맵 및 교육 기관 지원 제도 구축

3. 공급망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 국가 전략기술에 해상풍력 포함
- 공급망 기업에 대한 생산세액 공제제도 도입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전략적 활용

4. 공급망 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 세액공제 조건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부 포함
- 해상풍력 제조업 종사자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 창출

5. 입찰 시 산업경제·일자리 창출 배점 강화

-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내 산업경제 배점 강화·일자리 창출 항목 별도 명시
- 산정 기준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산출 방식 제시

6. 해외기업 투자유치와 수출지원 확대

- 전략품목 수출기업 지원에 해상풍력 산업 포함
-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에 해상풍력 관련 산업 포함

목차

1. 입찰물량 로드맵 발표와 인허가 창구 단일화.....6

2. 국가주도 항만·산업·발전단지 건설과 지원 8

3. 공급망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10

4. 공급망 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12

5. 입찰시 산업경제·일자리 창출 배점 강화 14

6. 해외기업 투자유치와 수출지원 확대 16

1. 입찰물량 로드맵 발표와 인허가 창구 단일화

▶ 배경

-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주요국뿐 아니라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도 정부 주도의 입찰을 통해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 영국은 정부 주도로 Round6까지 해상풍력 입지입찰 수행. 현재 13.9GW의 해상풍력 단지가 상업운영 중이며 총 77GW, 80개 프로젝트가 개발 중. 일본은 Round3까지, 대만은 Round3.2까지 입지입찰 진행
- 2023년 기준, 글로벌 해상풍력 규모는 75.2GW로, 해당연도 신규설치 용량만 10.8GW 수준. 총 설치 용량의 50%, 2023년 신규 설치 용량의 50.8%가 중국에서 진행
  - 중국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상승은 정부 지원의 역할도 있으나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시장의 규모 자체가 큰 것에 기인
- 주요국은 정부가 인허가 창구를 단일화하여 입지입찰과 계약입찰을 추진.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 과정의 비효율을 저감하고, 사업진행 정보를 객관화하여, 결과적으로 개발기간이 단축되는 효과
  - 덴마크는 각 부처가 인허가권 있으나 에너지청이 단일 창구. 영국은 입지입찰은 크라운에스테이트가, 계약입찰은 에너지안보 및 넷제로부에서 주관

▶ 현황 및 문제

-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 성장 지연은 보급 지연으로 국내시장이 미성숙하기 때문
  - 터빈을 제외하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은 제조업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수요 부족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
-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해상풍력발전이 포함된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처음으로 추진하여

해상풍력 1.431GW 낙찰. 이는 과거 수의계약 방식과 비교 훨씬 투명한 가격 협상이며, 정부가 입찰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

- 그러나 향후 입찰물량은 명확하지 않음. 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해상풍력은 단기-중기 시장 규모가 명확할 때 공급망 기업이 선제적인 투자 가능

- 현재 국내 해상풍력은 대규모 개발사업임에도 별도의 개발법 없이 사업개발 진행. 현재 매우 많은 발전사업허가가 발급된 상태(23.12기준 27GW 이상)
- 사업자들은 일원화된 중앙정부 창구 없이 개별 인허가를 득하며 사업을 진행. 이에 단지개발 상황과 진행의 진위여부 등을 객관적인 정보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 인허가 기관이 상이함에 따라 관련 정보는 현재 각 정부 부처 및 기관을 통해 산발적으로 제공되며, 이마저도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접근 불가
- 결과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해상풍력 보급목표 달성 여부는 현재 시장에서 불투명하다고 받아들이는 심각한 상황

개선 요구사항

2030년까지 연도별 입찰물량 로드맵 발표

-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를 기준으로 향후 3-4년 내에 입찰가능 물량 평가
- 2030년까지 수치화된 입찰물량 로드맵 발표하여 공급망 기업의 적극적 투자 견인

민간시장(Private Market) 육성을 통한 시장 규모 확대

- 대규모 전기 소비 기업이 PPA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의 지원제도 마련

개발 중 사업의 진행수준 평가와 주요 인허가의 통합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각각 추진되는 개별 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주요 인허가 협의수준 평가하여 통계 제공. 이를 통해 공급망 기업이 향후 실제 추진될 시장규모를 예상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국정부가 해상풍력 운영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 지자체가 따를 수 있는 정보공개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일관된 정보관리 추진

2. 국가주도 항만·산업·발전단지 건설과 지원

▶ 배경

- 해상풍력은 해양조사-인허가-착공-운전-해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활동이 연계된 복합산업. 주요국은 국가주도 입지계획과 항만계획, 산업육성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
- 국내 역시 해상풍력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터빈, 타워, 하부구조물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항만, 관련 산업과 연구개발을 위한 배후부지 마련 및 전력계통 등 정부의 주도의 선제적인 인프라 계획 및 구축, 입지발굴과 단지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등 필요

▶ 현황 및 문제

- 4차 항만기본계획('21-'30)에 해상풍력산업 관련 내용 거의 포함되지 않아 항만 미비로 인한 공급망 차질 예상. 풍력발전 관련 법 제정 차질에 따라 계획입지 지연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되고, 질서를 갖추지 못한 기존 인허가 체계 한동안 지속될 전망
  -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부가가치창출은 87조 원 규모('30년까지 14.3GW 기준)가 예상됨에도 국가의 산업육성 및 인력육성 계획과 항만이용 계획 부재
  - 대규모 개발로,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업임에도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지 않음. 계획입지제도는 지난 '17년부터 논의되었으나 아직까지 법제도 미비. 장기간에 걸쳐 준비가 필요한 전력계통 역시 체계적 계획 부재
  -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절차 긴급 추진 필요
- 해상풍력 보급에 따라 필요한 부문별 인력수요 예측 부재 및 제조, 설치, 운영,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 준비 미비

-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혼란 및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민간투자 및 기술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산업별, 기술별, 연도별 구체적인 지원 계획(규모, 대상, 기간 등)이 부재
-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인허가 창구 단일화, 계획입지제도 도입, 산업단지를 포함한 배후항만, 전력계통 등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준비 필요
  - 해상풍력사업에 있어 전력계통대응(안)과 항만개발대응(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이자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개선 요구사항

정부 주도 계획 입지제도 시행 및 산업 육성 종합 계획 수립

- 합리적인 입지계획으로 질서 있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공급의 안정성 및 중장기 비용 하락 유도
- 항만 개발, 전력 계통 건설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인프라의 선제적인 준비
  - 인프라 건설·투자에 있어 적극적인 민간투자참여(민투법) 방안 검토

정부 주도 인허가 단일 창구 운영

- 인허가 간소화 및 불확실성 감소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 투자 활성화

해상풍력 산업육성 지원 및 산업계 정보교류 지원

- 연구개발, 혁신, 상업화 촉진 전담기관 설립 육성 필수
- 한국, 나아가 아시아권의 해상풍력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필요

보급에 필요한 인재육성 로드맵 및 교육 기관 지원 제도 구축

- 해상플랜트 시공 및 유지·보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별 거점기관 확보 및 국가표준인증(K-reference) 확립

3. 공급망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 배경

- 2022년 10월, 정부는 “국가 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이 포함된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대 중점기술을 제시
  - 국가 투자 지원 집중, 인재, 국제협력, 산학연 거점 등 전략기술 육성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 주권 국가전략 총괄 추진체계 확립 등의 육성 지원이 목적
- 21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핵심전략기술에 포함하려는 법안 발의
  - 현재 핵심전략기술 10개 분야 200개 기술 중 해상풍력 비롯 재생에너지 미포함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2025.2.7) 시행 예정

▶ 현황 및 문제

- 우리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 전략기술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세액공제 제도 보유
  - 국가 전력기술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은 상대적으로 투자 유인책이 부족
- RPS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REC를 발급하나, 해상풍력 제조 관련 기업 지원 제도는 미비
  - 발전사업자는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원가 절감을 통한 전력 생산원가 절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저가 중국산 설비가 시장을 주도
  - 국산화 설비 또는 국내 제조부품 사용에 대한 우대 조치를 통해 해외 기업의 제품이라도 국내 생산을 촉진할 필요성 존재
- 현재와 같이 해상풍력 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유인이 아예 없다면 국내·해외

기업 모두 투자 유인이 있는 지역(해외)으로 이동할 가능성 존재

-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해상풍력 공급망 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최혜국 대우' 관련 국제무역규범과 무관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를 핵심자원으로 지정, 평상시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 실시 비상시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 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이 주요 내용

개선 요구사항

국가 전략기술에 해상풍력 포함

-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 전략적 육성
  - 관련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혁신 선도), 세계 전력설비 시장에서 해상풍력의 성장 전망(미래 도전) 재생에너지로의 체제 전환에 따른 원천기술 확보(필수 기반) 필요성을 고려하면 해상풍력 기술은 국가 전략기술에 부합

공급망 기업에 대한 생산세액 공제제도 도입

- 미국 IRA법에 따른 지원정책(AMPC)과 같은 공급망 기업 지원 도입
  -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달리 생산액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결정되므로 제조업 투자 확대 및 육성 효과 기대
- 해상풍력 공급망 특화 지역단위 산업(클러스터) 지원정책 확대로 지역산업 육성에 연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전략적 활용

- 터빈, 해저케이블, 설치 선박 등 해상풍력 전주기 물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시장 구조와 해외 대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방지

4. 공급망 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 배경

- 미국은 IRA법에 따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또는 설비투자에 대해 기존 생산 세액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와 투자 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 강화
  - 사업자는 둘 중 유리한 쪽을 택해 세액공제 가능하며, 최고액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자국 내 생산(2%), 특정 임금 및 견습 요건 충족(10%) 필요
  - 첨단 제조 세액공제(AMPC: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s) 제도는 미국 또는 미국 속령 내에서 생산된 청정에너지 중간재의 용량에 비례하여 PTC·ITC와는 별도로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로, 공급망에 포함되는 주요 부품 생산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미국 내 생산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
- IRA 시행 후 미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 시설에 923억 달러 민간투자 발표되고 생산 능력이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가 8만 개 이상 창출
  - 국가의 대규모 지원이 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시장 활성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확인

▶ 현황 및 문제

-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첨단전략산업법 등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및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
  -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IRA와 같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직접 효과가 발생하는 정책은 부재

- 해상풍력 공급망은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재생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임에도 일자리 지원 및 지역재생과 연계된 산업 지원·재정 정책 미비

개선 요구사항

세액공제 조건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부 포함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조건을 만족해야 최대 투자세액공제율 적용 가능하도록 제도 설정
  - 해외 노동인력도 우리 산업계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지원정책 함께 논의

해상풍력 제조업 종사자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 창출

-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확대 모색
  - 해상풍력용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등
- 청년을 위한 다양한 공제 프로그램 추가로 실질적 소득인상효과 창출
  - 해상풍력 공급망 기업에 대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제도 등을 우대·강화

5. 입찰시 산업경제·일자리 창출 배점 강화

▶ 배경

-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원별로 재생에너지 인증서에 차등화된 가중치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운영 중
  - 제도 이행은 설비 인증(한국에너지공단)과 인증서 발급을 거쳐, 거래(한국전력거래소)되어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에 기반 정산됨. 즉, 정부재정이 아닌 전기요금이 재원
- 「공급 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관련 내용 포함
  -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위원회(풍력 입찰위원회)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입찰 참여서를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제31조의 3, 제44조의 2)

▶ 현황 및 문제

- 우리나라 해상풍력은 아직 시범사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지원의 부담이 한국전력 한 개 기관의 적자로 누적되는 데에 대해 사회적으로 매우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
  - 특히 해상풍력은 해외 투자사가 많아 RPS 정산금의 방향에 사회적 관심과 논쟁이 커지는 상황. 정부지원 방향이 국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여를 강화하는 방향이 되지 않는다면 RPS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될 것
- 공급망 기업 입장에서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중국 등과 비교하면 원가경쟁력을 빠르게 잃어 사업성이 낮아 쉽사리 못 들어가는 상황
  - 해상풍력 참여를 고민하는 공급망 기업은 정부가 로컬 콘텐츠 지원 등에 자신이 없다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알려달라는 요구 역시 존재

- 발전사업자는 어떠한 형태든 국내 산업 관련 규정이 없으면 가격 경쟁력과 실적이 있는 외국산 공급망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 제품 간의 발전적인 경쟁도 유도되어야 할 필요성 존재
- 관련 전문가들은 해상 플랜트(Oil&Gas) 산업은 로컬 콘텐츠 규범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친다면 적절한 수준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전망

- 현재 국내 산업 효과가 반영되는 제도는 고정가격계약 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은 계량평가(입찰가격 60점)와 사업내역서 평가(주민수용성 8점, 산업경제효과 16점, 국내 사업실적 4점, 사업진행도 4점, 계통 수용성 8점)로 구성
  - 산업·경제효과는 산업생태계(국내 경제·공급망)기여도 및 혁신 역량 제고 노력,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도를 평가. 국내 경제 기여는 ① 주기기/하부구조물 제조 및 건설 인프라 및 ② 운영·관리 분야 인프라에 대한 투자 실적 및 계획 등으로, 국내 공급망 기여는 ① 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 핵심 기자재 및 ② 발전소 운영유지 및 관리로 구분

개선 요구사항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내 일자리 창출을 별도 명시 후 산정 기준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산출 방식 제시

- (기존) 산업·경제효과: 국내 경제 기여
- (수정) 산업·경제효과: 국내 경제 기여, 국내 공급망 기여(배점확대), 국내 일자리 창출 기여
- (추가) 수치화 된 일자리 창출 기여 산정 방식 명시

6. 해외기업 투자유치와 수출지원 확대

▶ 배경

- 2023년 8월, 정부는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통해 23조 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을 통한 수출 회복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발표
  - 3대 정책 방향으로는 신 수출 판로 개척 지원(4.1조 원),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18.7조 원),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무역금융 지원)이 있으며, 10대 과제로는 신규 수출국 진출 지원(3.3조 원), 해외 수주 금융 지원(0.3 조 원),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0.5조 원),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11조 원). 전략품목 수출기업 지원(1.3조 원), 수출기업 설비투자 특별 지원(1조 원), 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신설(5.4조 원), 수출환어음 비용 경감 및 이용 지원, 수입신용장 금리·만기 우대, 수수료 인한 등 선물환 이용 지원 가능
- 영국은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도 투자금 지원, 세금 및 관세 혜택을 지원하며, 특정 항구에 입지할 경우 관세혜택 등 가능
  - 지원금(The Green Industries Growth Accelerator(GIGA)), 수출개발보증(Export Development Guarantee (EDG)), 인프라 개발은행(UK Infrastructure Bank, Scottish National Infrastructure Bank)의 유기적 협력

▶ 현황 및 문제

- 전략품목 수출기업 지원 대상은 8대 주력사업 또는 12대 신 수출 분야* 영위 기업이면서 최근 1년간 수출금액 또는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을 충족하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해상풍력은 이 중 녹색산업에 해당

*8대 주력사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선박, 철강, 기계, 석유화학

*12대 신 수출 분야: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 녹색, 농식품, 수산식품, 스마트팜, ICT 서비스, 콘텐츠, 에듀테크, 바이오헬스, 화장품

*녹색산업: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

- 단, 2023년 5월 범부처 수출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지정 「30대 수출유망 세부 품목」에서는 해상풍력 관련 산업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 전망과 중요성에 대한 국내 인지도 부족

개선 요구사항

전략품목 수출기업 지원에 해상풍력 산업 포함

- 12대 신 수출 분야에 해상풍력 산업 포함하여 전략품목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기업 설비투자 특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30대 수출유망 세부 품목에 해상풍력 관련 산업 포함

- 향후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바, 관련 국내 제조업 중소·중견 기업이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활동내역

날짜	행사명	주최
2023년 4월 20일	제34회 전력포럼 해상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	전력포럼
2023년 11월 17일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정책의 방향	기후변화센터 ㈜에너지와공간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2024년 2월 13일	해상풍력 공급망 로드맵 제안을 위한 워킹그룹 킥오프 미팅	㈜에너지와공간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2024년 3월 29일	해상풍력 공급망 로드맵 워킹그룹 3월 정기회의	㈜에너지와공간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2024년 4월 26일	해상풍력 공급망 로드맵 워킹그룹 4월 정기회의	㈜에너지와공간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2024년 5월 17일	해상풍력 공급망 로드맵 워킹그룹 5월 정기회의	㈜에너지와공간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2024년 5월 31일	제1회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해상풍력산업 진흥과 22대 국회의 역할	기후변화센터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에너지와공간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2024년 6월 27일	해상풍력 공급망 로드맵 워킹그룹 6월 정기회의	㈜에너지와공간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2024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2024년 7월 12일

Contact: contact@energyandspace.kr

2024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